

• 날짜: 2013년 7월 1일(월) • 전화: 02-832-4211~2 • 홈페이지: www.ppip.or.kr

•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담당: 김 철)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비판

< 요약 >

- 지난 6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 공공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운영 방안은 지난 해 7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첫 정책으로 발표한 것임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정부 3.0의 화려한 미사여구 사이에 빈 구석이 상당히 많이 있음
- 정부 3.0 = 전자정부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
 - 행정안전부가 2011년 3월 발표한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민·관 협치 및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부재
 - 참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민·관 협치는 기술적인 요소들만 고도화된다고 실현되진 않음
 -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과 회의 비공개 논란 등을 보면 말만큼 실천이 뒤따를 것인지 의문
- 창조경제의 부수적 정책일 뿐
 - 민·관 협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장이 정부 3.0 추진계획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 실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제고에 있음
 - 정부 3.0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하위 정책에 불과

- 공공정보의 영리화에 대한 대책 부재
 - 공공정보들이 자본에 의해 영리화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 서비스정부 표방, 바우처서비스로 대표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자체가 시장논리 전제
 -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의 남용 가능성 간과
- 기존의 공공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 간과
 -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를 정부가 독점한 상황에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는 레토릭에 불과
 - 정부부처들은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의 자료가 아니”라거나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공개결정 지속
 - 정보공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 범위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핵심정보들이 공개되어야 그 실효성 담보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
 - 정보 공개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정보공개 메커니즘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은 채 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
 - 공개·공유·소통·협력·참여 등을 실질화하는 행정문화의 혁신 필요
 - 정부 3.0을 떠벌리기에 앞서 공공정보의 공유를 제대로 하는 정부 2.0, 아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하는 정부 1.0부터 정착되어야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비판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올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3.0'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해 7월 11일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첫 정책으로 발표한 것이 공공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운영 방안이었다.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 3.0 시대를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로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제시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정책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은 정부 운영방식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지난 1년여 사이에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꾸준히 언급되었고, 보완되어 왔다.

18대 대선 시기에는 정부개혁을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공약 중의 하나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정부 3.0 시대)'가 제시되었다.¹⁾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외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이 주된 내용으로 선언되면서 정부조직 개편도 정부 3.0에 포함되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수위 백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운영시스템의 혁신방향인 신뢰받는 정부의 추진기반으로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정부 3.0' 달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뿐만 아니라,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4월 5일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행정은 정부 3.0으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그 추진과제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정보 개방·공유로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갈수록 정부 3.0에 하나하나씩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모양새이다.

이쯤되면 정부 3.0은 정부의 본래 업무에 충실하자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부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지팡이로 바뀐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것도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의 동전 양면이다. 언론에서는 정부 3.0의 기본 방향은 타당하며, 약간만 보완하면 될 듯이 얘기하지만, 화려한 미사여구 사이에 빈 구석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 글은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월 19일 발표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

1)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2012.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시절 발표했던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겠습니다. 일방향이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③ 민·관 협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 구현 ○ 국민참여 확대 및 참여·소통 채널 다양화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플랫폼) 구축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조정과제' 지원 ○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지원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 마련 ○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 ○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 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9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3.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비판

1) 정부 3.0 = 전자정부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

우선, 정부 3.0이라고 하지만, 정부 2.0과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모호하다. 정부 2.0(Government 2.0)이라는 용어도 아직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데,²⁾ 정부 3.0이라는 용어가 명확할 리는 만무하다.

정부 2.0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2009년 말 '서울버스' 어플을 둘러싼 공공정보의 공개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유주완 씨가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이폰용 무료 어플 '서울 버스'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공공정보의 무단이용'이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법적 제재를 운운한 이후, 정부와 경기도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차단 조치 해제를 지시했다.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도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 2.0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 2.0은 웹 2.0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상호신뢰를 통해 민관협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부 2.0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이 겉으로 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정부 3.0이 제시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10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가 투명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2.0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그 다음날

2) 정부 2.0(Government 2.0)이라는 용어는 웹 2.0(Web 2.0)만큼이나 그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지만,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다. 어떤 이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민참여와 소통의 확산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오픈 API의 제공 등을 통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재활용이 정부 2.0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윤종수, 2011).

이를 3.0으로 말을 바꿨다. 첫 대선 공약인데 정부 2.0으로는 새롭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리라. 하지만 용어 자체가 새롭다고 내용까지 금방 새롭게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 정부 3.0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민주통합당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것을 베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3개 부처는 2010년 3월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공공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시달하고 '공유자원포털'(data.go.kr)을 통해 집적된 정보를 서비스하였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³⁾

더욱이 이번에 나온 정부 3.0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 3월 발표한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안)에서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Open),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Integration), 조직, 부서간 협업(Collaboration) 및 정보 공유,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Green)으로 정리되는 추진전략에 몇 가지를 덧붙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직전인 지난 5월에 나왔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정부 3.0 정책보고서도 Gov3.0 구현방향으로 열린(Open) 정부, 플랫폼(Platform) 정부, 서비스(Service) 정부, 유능한 혁신 정부(Sustainable Creative Government)를 제시하면서, 스마트정부와 Gov3.0을 동일시하고 있다.⁴⁾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건대, 정부 3.0은 결국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일 따름이다.

2) 민·관 협치 및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부재

정부 3.0 추진계획은 직접민주주의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개론 차원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3) 한겨레21 제951호, "공공정보 구슬 꿰어 보배 만들어보아요," 2013.03.11.

4) 물론 여기서는 Gov3.0(스마트정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 관점은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하지만, 행정적 관점은 국가 운영 주체 등 거버넌스 변화로 이해하며, 포괄적 관점은 행정·소통·서비스의 본질과 미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2013: 13-22). 그리고 2011년 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발족과 함께 기술적 관점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가 점차 보다 포괄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이나,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자정부의 프레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게 '정부 3.0'이라고 얘기한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부 3.0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3.0이 실현되면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돼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주요국정과제에 대해 온라인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투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참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민·관 협치 강화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강조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민·관 협치는 기술적인 요소들만 고도화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정보격차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 문제는 온라인 직접민주주의가 직면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3.0은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과연 말만큼 실천이 뒤따를 것인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빼놓지 않았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과 회의 비공개 논란 등도 정부 3.0이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냉소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 활성화, 발전산업의 경쟁 확대,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각종 (우회적) 민영화 정책을 적시하면서도, 정작 공청회 등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사회를 들러리 삼아 밀어붙였다. 민·관 협치는 의지 표명으로 달성되진 않는다.

덧붙여, 기존 민주주의론에서는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3) 창조경제의 부수적 정책일 뿐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개방을 통해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⁵⁾ 이런 예측의 실현가능성은 별개로, 여기에서 정부 3.0이 내포한 본질이 드러난다. 민·관 협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장이 정부 3.0 추진

5) 산업별 생산유발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공공정보의 비중에 대한 해외 사례와 고용계수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제시된 것인데, 공개되는 정보 1억여건의 상당부분을 이런 식의 허황된 수치정보가 차지할 우려가 있다.

계획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 실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제고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2013)의 정부 3.0 정책보고서를 비롯한 기존 논의에서는 민주성, 능동적 참여, 개방, 공유 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보도자료의 제목은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이다. 정부 3.0의 개념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과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결국 정부 3.0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하위 정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4) 공공정보의 영리화에 대한 대책 부재

정부는 공공정보 중에서도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들 정보들이 자본에 의해 영리화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이 자신들이 가공하였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 3.0의 밑바탕에 시장논리가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맞춤형 서비스의 사례로서 언급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는 전형적인 시장화 기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공정보의 영리화는 정부 3.0의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허버트 실러(2001)는 공적 정보 제공기관의 희생 속에 사적인 정보 제공업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정보화를 우려한 바 있다. 미국 경제를 특징짓는 정보의 상업화와 정보 제공자들의 사상 유례없는 집중화로 인해 정보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폐해에서 잘 나타나듯이,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배타적인 사적 정보로 바꾸고, 이를 이용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영리 기업들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연계·통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정부 3.0 추진계획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제시한다. 21세기판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하는 게 아닌 바에야 빅데이터 활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가진 부작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PRISM) 사건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는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기존의 공공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 간과

정부 3.0에서 그나마 평가해줄 수 있는 내용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이다. 물론 공개되는 공공정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외한 채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를 정부가 독점한 상황에서 이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대상정보 조항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제약해왔다.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정보공개를 봉쇄해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비공개 정보가 바로 국민세금으로 수행된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들이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용역의 대략적인 개요가 공개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들 중 내용 자체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5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되기 일쑤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의 자료가 아니"며,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향후 원활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이 궁금하여 찾아봤더니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는 물론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정부 3.0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다른 부처들은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정보공개 건수도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서 1억건으로 늘리겠다고 하였는데, 이 많은 정

보들에 대해 과연 법적 근거를 갖출지 의문이다. 기존의 공공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사실 정보공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핵심정보들이 공개되어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대량 공개에 따른 질 낮은 정보의 양산, 불필요한 정보의 남발로 인해 막대한 필터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당연히 인터넷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의 경우 관련 언론보도기사나 관계부처 합동의 보도자료내지 해설자료는 쉽게 검색되는 데 반해, 그 원문을 찾아보긴 어렵다. 안전행정부 자료실에 있기는 하지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4. 결론

정보 공개가 국정운영의 만능키는 아니다. 이를 테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인 '정부 3.0'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맥락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공개·공유·소통·협력, 모두 근사한 단어들이지만, 책임 부담과 대안 제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시민들이 요청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2012년 2월 27일자 기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명단은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았으나, 2013년 명단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결국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공개되어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들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⁶⁾ 이러한 사례는 정보 공개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정보공개

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대강 관련인사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93%," 2013/06/11.

메커니즘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은 채 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공개와 함께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을 바꾸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 3.0에서 말하는 공개·공유·소통·협력·참여 등이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행정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 3.0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과의 소통 및 정책의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보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 3.0을 떠벌리기에 앞서 공공정보의 공유를 제대로 하는 정부 2.0, 아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하는 정부 1.0부터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3.0이 정책 과정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실질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3. 6.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윤종수. 2011. 서문.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호주정부 2.0 태스크포스보고서』. gov20.kr 옮김. 아이앤유.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행정안전부. 2011. 3.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허버트 실러. 2001. 『정보불평등』. 김동춘 옮김. 민음사; Information Inequality.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호주정부 2.0 태스크포스보고서』. gov20.kr 옮김. 아이앤유; Government 2.0 Taskforce. 2009. *Engage :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Australia*.